

“북극항로 시범 운항… 동남권 대도약 실현”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 신년사

해양수도권 육성전략 수립하고
부산항, 세계 최대규모 항만 목표
친환경·스마트 기술로 경쟁력 강화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장관 직무 대행)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범 차관은 5일 부산 동구 해수부 부산청사 별관에서 열린 2026년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 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이어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부산항을 세계 최대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이 지난해 23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업무 보고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또 친환경·스마트 기술을 접목해 해운·항만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는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다양한 투자자원을 마련하고, 안전자율운항선박 핵심기술도 본격적으로 개발하겠다”며 “LNG, 메탄올 등과 같은 친환경 연료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벙커링 시설을 조성하고, 광양항에 시범항만을 조성해 국산 스마트 항만 기술을 실증하고, 전국 항만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 차관은 수산업 혁신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수산자원 대비 과도한 어선세력을 집중적으로 감축하는 동시에 기존에 오래된 어선은 대형화·현대화된 어선으로 개편하는 어업 구조개선 계획을 수립하겠다”며 “어선 크기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도 절반 가까이 조정·철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식업은 수온이 낮은 먼 바다와 동해 해역에서 신규 양식장지를 발굴하고, 스마트 양식 선도지구 육성을 통해 양식업의 스마트화와 규모화를 유도하겠다”며 “수산물 품질을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품목별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국도 다변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 차관은 연안 지역경제를 살리는

해양수산업을 육성할 계획도 밝혔다. 그는 “숙박·체험형 프로그램 발굴로 어촌을 지역관광 자원으로 탈바꿈하고, 해양레저, 해양치유, 생태공원 등과 같은 지역별 해양관광거점을 조성하겠다”며 “지난해 선정된 3개 지역을 중심으로 초광역권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개발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해상풍력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기후부와 함께 1단계 예비지구를 지정·발표하고, 어업인, 수협이 참여하는 이익공유 모델을 개발하겠다”고 전했다.

김 차관은 “해양사고 저감을 위해 시설 중심의 안전관리를 넘어 인적 과실·오류까지 관리하고, 여객선, 항만, 어선, 해양수산업장의 맞춤형 안전관리도 철저히 하겠다”며 “중국 불법어선에 대해서는 대응방식을 퇴거에서 나포로 전환하고, 경제적 제재 조치 등을 강화해 해양주권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서울시교육청

인권조례 폐지 재의요구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의결에 대해 재의요구 방침을 공식화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5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지난달 16일 제333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학생·교사와 함께 재의요구 입장을 밝히고, 폐지 효력을 다투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는 등 법적 대응과 제도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 16일 제333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번 폐지조례안은 학생의 인권 보호 체계를 전면 폐지하는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 보장 의무에 반한다”라며 “국제인권규범의 취지를 훼손하고 공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위법한 조례안”이라고 말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할 경우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재의요구의 구체적 사유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학생 기본권 보호 체계를 전면적으로 해체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과된 기본권 보장 의무에 반하는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조례 차원에서 모두 없애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

전국적 고용위기 닥치면 ‘고용유지지원금’ 늘린다

노동부,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제도 적용 범위 늘리고 요건 단순화

앞으로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될 경우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5일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요건·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규모 고용위기 상황에 보다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 적용 범위를 넓히고, 기업이 실제 활용 과정에서 겪어온 복잡한 요건을 정비했다.

우선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 대상에 기존의 ‘특정 지역·업종’ 외에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경우’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고용 위기 발생 시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 요건을 완화하거나 지원 수준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고용유지조치 요건도 단순화했다. 현행 제도는 휴업과 휴직을 구분해 서로 다른 지원 요건을 적용해 왔으나, 개정안은 유급 고용유지조치의 경우 ‘피보험자별 월 소정근로시간 20% 이상 단축’ 기준으로 요건을 통일한다.

특정 부서나 일부 인원에게도 적용

이 가능해져 기업의 인력 운영 유연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무급 고용유지조치 역시 요건이 일원화된다. 그간 휴업과 휴직에 따라 달랐던 사전 요건과 최소 실시 인원 기준을 ‘노동위원회 승인’과 ‘5인 이상’ 기준으로 통합해 제도 활용 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고용유지조치 종료 후 지원금 신청 기한을 기존 1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연장한다. 고용유지 대상 인원이 많아 서류 준비에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장이 신청 기한을 놓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김영환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대규모 고용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제도 활용의 요건과 절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며

“기업이 보다 쉽게 고용유지지원 제도를 활용해 경영상 악화에 대비하고, 노동자도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고용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해 노동자의 고용안정성을 지원하는 제도다. 유급 고용유지조치의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지급 금액의 3분의 2, 대규모 기업은 2분의 1을 지원하며, 피보험자 1인당 1일 6만8100원, 연 180일 한도로 운영된다. 무급 고용유지조치는 피보험자별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지자체 소액집행 잔액 기준 확대

기획예산처, 예산 집행지침

50만 원에서 500만 원 미만으로

국고보조사업에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액집행 잔액 기준이 기존 50만 원 미만에서 올해 500만 원 미만으로 대폭 늘어난다.

특히, 예산 절감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의 활용 범위를 넓힌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아울러 임금 체불 이력이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제한해 재정 집행의 책임성과 근로자 보호를 동시에 강화한다.

기획예산처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이번 지침은 ▲국고보조사업 집행과정에서의 지자체 자율성 확대 ▲취약계층 근로자 및 저연차 직원 보호 ▲

정부·공공기관 재정 집행의 책임성과 효과성 강화에 초점을 뒀다.

먼저 지자체가 자체 노력으로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절감한 경우 해당 집행잔액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다.

종전에는 동일 부문 내 사업으로만 사용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국가재정 운용계획상 동일 분야 내 사업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단년도 한시 신규사업 추진도 가능해졌다.

특히,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액 집행 잔액’ 기준도 기존 50만 원 미만에서 500만 원 미만으로 대폭 상향됐다. 예산 절감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례도 지침에 명시해 지자체가 해석 부담 없이 집행잔액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조류인플루엔자 감염력 10배… 방역 총력

〈예년대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장에 전담관 배치 등 조치 강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번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감염력이 예년 대비 10배 이상이라며 각 지자체에 방역 강화를 당부했다.

송 장관은 5일 세종청사에서 방역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동절기는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 3가지 유형의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바이러스의 감염력도 과거에 비해 10배 이상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전보다 사람·차량 출입통제, 소독 등 방역조치를 한층 더 강화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최근 발생이 많은 경기, 충청, 전라지역은 지역재난대책본부를 통한 가금농장 1대1 전담관 제도를 적극 활용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일 세종농식품부 청사에서 방역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농식품부

해 방역지역 관리와 가금 농가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산란계 농장을 중심으로 고강도 방역 대책을 시행한다. 우선 16일까지 전국 5만 수 이상 산란계 농장 539곳에 전담관을 1대1로 지정·배치해 축산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장에 조준 교수

근로복지공단은 병원장 공개모집을 통해 조준 건국대 의대 교수를 신임 인천병원장으로 임명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공단 소속 병원 중 처음으로 정부(인사혁신청) 민간인재 영입 지원 제도를 활용한 사례다.

조준 교수는 신경외과 분야에서 국내·외 고난도 환자 진료 경험을 쌓아온 의료 전문가로, 건국대병원 진료협력센터장, 홍보실장 등을 역임하며 병원 운영과 대외 협력 전반을 총괄한 경험을 갖춘 의료 경영 리더로 평가받는다.

앞서 공단은 전문성과 공공성을 겸비한 병원장 후보를 더욱 폭넓게 확보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에 민간 전문가 후보자 추천을 요청했으며, 공개모집과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을 결정했다.

/세종=한용수 기자